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75.50 (-5.30)	725.28 (-6.47)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905 (-0.026)	1336.75 (-5.45)

m-커버스토리

‘中 들보잡 배터리’, 불신 더 키웠다

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배터리 신뢰 폭 CALT 아닌 파라시스 제품 보유한 특허 수 턱없이 부족 현지서도 화재 문제 일으켜

‘주차시 배터리 충전량 90% 이하만’, ‘선적시 배터리 충전량 50% 이하만.’

지난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기점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마치 전기차가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충전량을 확인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이어 온 전기차 시장이 내연차보다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아쇠가 됐다.

차량 수십대가 불에 타고 그 올리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슈가 됐지만 벤츠 전기차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CALT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럭셔리 가치’를 강조해 온

벤츠가 자사 전기차 배터리는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제품에 비해 20~30% 이상 저렴하다.

특히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 받았던 파라시스는 중국 현지에서도 기술 등 분야에서 비주류로 취급받는 기업이다. 중국 현지에서 판매량은 10위권에 머무는 기업으로 배터리 관련해 보유한 특허 수도 턱없이 모자라다.

파라시스가 미국에서 인정 받은 특허 수는 약 20개 정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약 3800개), 같은 중국 기업인 CATL(약 2600개)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도 화

재 문제를 일으키며 이 회사의 제품을 탑재한 3만여 대의 전기차 리콜된 전력도 있다. 미국에서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적용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벤츠 전기차를 모는 한운전자는 “이번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했더니 BMW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80% 가량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를 믿고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다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벤츠 전기차 차주들은 벤츠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

AI 시대, 지능화된 물류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흐름(flow)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며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물건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그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 ◆ 주 제 : AI시대 FLOW전략 이동의 한 순간, 물류의 매 흐름
- ◆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강 연 :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과장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차두원 소넷 대표
김준환 스트라드비전 대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 처리, 규제개혁 요청

4당 대표 만남 최태원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법안통과·애로사항 촉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연달아 만나며 ‘규제 개혁’ 등 국회 차원의 경제계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다.

최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를 맞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 통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을 만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처럼 메달을 따오게 할 수 있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러던 비공개 면담에서 최 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사업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청년 문제, 교육·지역 격차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관련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족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최태원 회장을 만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만나서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보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박태홍·윤도현 기자 pth7285@

尹 “민주화의 도시 ‘광주’ AI 첨단도시로 도약해야”

2027년 AI영재고 개교 총력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의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묘지에 방문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광주 발전 비전으로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도시” 비전에 대해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예산 2배 논란… 대통령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
- ▲민중, 김해경 소환조사에 “추석법상에 야 대표 부부 제물 올려” /사진 뉴스1

- ▲한동훈, 이공계 의원들과 조찬… 정부 “의료 개혁” 강행에 쓴소리도
- ▲국민의힘,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신빙성 없는 얘기”



- ▲행안장관, 지역상품권 ‘국가책임’ 행안위 의결에 “예산권 침해” /사진 뉴스1
- ▲조국 “김정숙 여사, 극우 시위 탓 은행 못가 ‘대리 송금’”